



19일 오후 광주서구 5-18기념재단에서 5-18역사왜곡 법률대응 성과 및 2026년 법률대응 현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뉴스스

5·18기념재단, 1년간 왜곡·편향 법률 대응 26건 집계

5-18기념재단이 1년 여 기간 동안 진행 해온 5-18민주화운동 왜곡·편향 관련 법률 대응 결과 형·민사 사건 26건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 됐다.

5-18 왜곡 도서를 배포 금지하고 왜곡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판 등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5-18기념재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동안 진행 해온 5-18 왜곡·편향 관련 법률 대응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과 5-18유공자들의 고소·고발을 통한 수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통틀어 총 26건에 대해 대응에 나섰다.

이 결과 일간지에 5-18 왜곡 기사를 실어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던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전 대표에 대한 고발 건, 극우인사 지만원씨가 쓴 5-18왜곡도서에 대한 출판금지 고발 건 등 2건에 대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사재판도 4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 씨가 쓴 또 다른 왜곡 도서와 전두환씨가

전두환 회고록·지만원 왜곡 도서 손배 승소 '성과' 왜곡 도서 16권·미디어 4건 신규 확인... "검토 중"

낸 회고록 등에 대해 출판을 금지하고 유공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2건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밖에 5-18 왜곡 기사를 작성한 허경전 스카이데일리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20건을 진행, 불송치(3건)와 수리거절(1건)을 제외한 16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재단은 지난달 지씨가 낸 신간을 확인하고 5-18 왜곡 여부를 들여다보는 등 새로 파악된 도서 16권과 미디어 4건에 대해서도 5-18 왜곡·편향 법률대응에 나서지 검토 중이다.

재단은 최근 마무리된 전두환 회고록 민사재판을 예로 들면서 5-18 왜곡·편향 대응이 곧 진상규명과 맞닿아 있다고 역설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5-18재단과 고(故) 조보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등이 전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상 재판 과정에서 5-18 단체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는 "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단죄된 부분에서의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며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게 된 것처럼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진짜 피해자인 민주화운동 세력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의 회고록은 거짓을 사실처럼 보이게 위해 대단히 성실하게 꾸며낸 책임 탓에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할 위험이 크다"며 "악의 성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지키려는 이들도 더 치열하고 성실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을 향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금지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적극

적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기영 민변광주전남부지부장은 "재단이 진행 중인 왜곡·편향 법률 대응 중에서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내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의 적용을 요구하는 내용이 집중 포함됐다"며 "(사법기관은) 과거의 명예훼손죄 범리에 기초하는 태도가 여전하다. 5-18에 대한 왜곡 표현을 전체적·맥락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특정 지역과 집단에 대한 혐오적 표현을 동원해 교묘하게 범망을 피해간 논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5-18왜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경제적 열망도 근절해야 한다"며 "이밖에 왜곡 근절을 위한 노력들이 한데 뭉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필요성을 규범적 차원에서 통합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아쉽다"며 "5-18 정신은 이미 헌법적 가치로 규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성문화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부

민주당, 텃밭 광주·전남서 6월 지선 '경선 전쟁' 돌입
 전남 시장·광주 구청장, 지방의원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공천 심사 개시... 4월 중순께 면접 완료... 컷오프 등 관심사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더블어민주당이 텃밭 광주·전남에서 본격적인 경선 전쟁에 돌입했다.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이 모두 마무리되는 4월 중순까지 피말리는 경선레이스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천률을 놓고 유·불리 쟁론도 분주하다.

19일 광주·전남 시·도선관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0일부터 시작된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앞서 3일 시작됐고,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3월22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전송, 전자우편 전송,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로 홍보물 발송, 어께띠 착용, 공약집 발간 등이 가능해진다. 후원회도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경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달 12일부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와 공천재심위, 선거관리위, 전략공관위 등을 차례로 꾸리고,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 초대 전남 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면접은 23~24일, 예비경선은 다음달 초 각각 시작될 예정이다.

시·도당 공천심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시당은 최근 기초단체장·지방의원 후보공모 결과 5개 구청장 22명, 광역의원 61명, 기초의원 88명 등 모두 171명이 접수를 마쳤고, 전남에서는 지난 12일까지 692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도당은 지역구별 실사를 시작으로, 예비후보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

다. 민주당은 4월20일까지 모든 선거구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밀 검증과 컷오프, 후보별 가·감산과 중앙당 의결까지 거치고 나면 경선대상 후보수에는 일부 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당 공천률에 따라 시·도당 공천위가 어떤 잣대를 들이밀지도 관심사다. 각 후보 진영은 이에 따라 경선 물의 유·불리를 놓고 다양한 전략을 짜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특히 특별시장 공천은 '권리당원 50%·여론 50%'인 기존 방식으로는 인구와 당원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없다고 보고 50+50에 시민참여위원제를 융합하는 방식, 권역별 경선, 선호도 투표 등이 거론되고 있어 불확실성에 따른 다각적인 플랜과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 확대, 특별시 광역의원 정수 조정 등도 경선 레이스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구가 관계자는 "선거구별 경선 인원이 몇 명으로 압축될지, 어느 후보에게 어떤 페널티 또는 가산 규정이 적용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통합단체장 선거는 합동연환, 기초단체장은 조별 경선, 지방의원은 가·감산 여부 등이 승패를 가를 수 있고, 하위 20% 페널티도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에선 6월 지선을 통해 초대 특별시장과 초대 특별시교육감, 기초단체장 27명, 광역의원 84명, 기초의원 310여 명 등 모두 430여 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승원 기자

지면안내

- ▶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 '통합 원칙, 제대로 지켜질까' 우려 3면
- ▶ 광주시, '중대재해 발생 제로' 종합계획 수립 9면

Goheung Spaceship Terminal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

제16회 고흡군
우주항공축제

2026.5.2.④ - 5.5.⑥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흡군 우주항공축제위원회